

글로벌 고령화

글로벌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2050년이 되면 60세 이상 세계 인구가 21억 명으로 늘어나 10~24세 인구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고령화가 사회·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관해서는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가 미래 사회에 미칠 영향이 부정적일 것이라고만 단정 짓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노년층의 증가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문제를 야기하지만 과거의 노년 세대보다 교육 수준이 높고 더 건강해진 노년층은 지식경제에서 갖는 잠재력을 토대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20세기에 들어와 세계 인구는 두 차례나 두 배로 증가했다. 금세기에는 곳곳의 출산율 하락으로 인해 두 배 증가하는 일이 한 번 있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년층은 25년 내에 두 배로 증가할 전망이다.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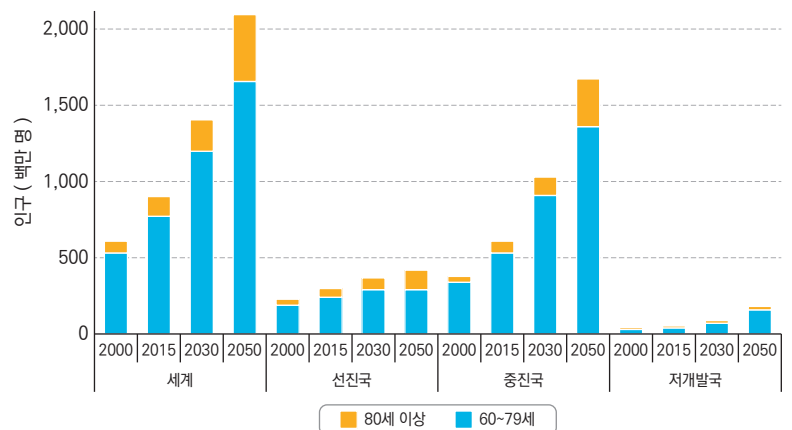
인구 고령화가 사회·경제에 미치는 파장과 그 대응에 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다. 국제사회는 1982년에 개최된 제1차 세계고령화총회(World Assembly on Ageing)에서 '비엔나 국제고령화행동계획(Vienna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을 수립하고 복지, 소득보장, 고용, 가족, 주거정책 등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991년 유엔총회는 노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UN Principles for Older Persons)'을 채택하고 노인의 자립, 참여, 보호, 자아 실현, 존엄성과 관련된 18가지 권리를 명시했다. 2002년에 개최된 제2차 세계고령화총회는 '마드리드 국제고령화행동계획'과 '정치적 선언'을 채택하여 21세기 노년층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태도, 정책, 관행의 변화를 요청했다.

인구 고령화가 미래 사회에 미칠 영향이 부정적일 것이라고만 단정 짓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노년층의 절대적·상대적 증가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하지만 과거의 노년 세대보다 교육 수준이 높고 건강해진 노년층은 지식경제에서 갖는 잠재력을 토대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고령화

유엔의 '2015년 세계인구전망(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5 Revision)'에 따르면 향후 수십 년간 전 세계적으로 60세 이상 노년층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며, 증가 속도도 지속적으로 가속화될 전망이다. 2015년 9억 100만 명이었던 60세 이상 인구는 2030년 약 14억 명(56% 증가)으로 증가할 것이며, 2050년엔 2015년의 2배 수준인 21억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80세 이상의 "초고령" 노년층은 더 빠르게 늘어나 2050년에 그 수가 4억 3,400만 명(60세 이상 노년층의 20%)에 달해 오늘날 수준(1억 2,500만 명, 60세 이상 노년층의 14%)의 세 배로 늘어날 전망이다(그림 1 참조).

그림 1 연도별·지역별 60~79세, 80세 이상 노년층 비율



출처: United Nations (2015).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5 Revision.

지역적으로는 향후 15년 동안 60세 이상 노년층의 수가 남아메리카와 지중해 연안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늘어날 것이며(60세 이상 노년층 인구 71% 증가), 그 뒤를 아시아(66%), 아프리카(64%), 오세아니아(47%), 북아메리카(41%), 유럽(23%)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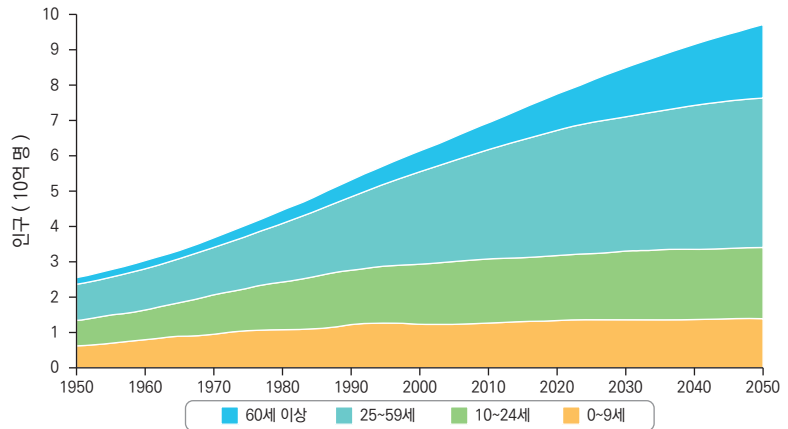
전 세계적으로 2010~2015년 기간 중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4.5세를 더 살아 2015년 기준으로 여성이 60세 이상 인구의 54%, 80세 이상 인구의 61%를 차지했다. 향후 남성의 평균수명이 여성을 따라잡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초고령 노년층에서의 성비는 차츰 균형을 이루어 2050년이 되면 80세 이상 여성의 비율이 58%로 줄어들 전망이다.

노년층 증가 현상은 농촌보다 도시에서 더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 도시의 60세 이상 인구 증가율은 68%였으나 농촌 지역의 증가율은 25%에 그쳤다. 2000년 60세 이상 인구의 도시 거주 비율은 51%였으나 2015년에는 58%로 증가했다. 초고령 노년층은 도시 지역에 더 많이 집중되어 있다. 도시에 사는 80세 이상 인구가 2000년 56%에서 2015년 63%로 증가한 것이다.

2030년이 되면 60세 이상 인구가 0~9세 유년층 규모를 넘어설 것이며(14억 명 대 13억 명), 2050년이 되면 10~24세 청년 인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21억 명 대 20억 명)(그림 2 참조).

노년층 증가 현상은 농촌보다 도시에서 더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그림 2 연령별 인구구조 변화



출처: United Nations (2015).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5 Revision.

인구 고령화는 글로벌 현상이지만 노화 과정은 지역에 따른 차이를 보여 선진국에서는 1세기 전부터 노화가 시작된 반면, 개발도상국에서는 최근에 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인구 고령화는 글로벌 현상이지만 노화 과정은 지역에 따른 차이를 보여 선진국에서는 1세기 전부터 노화가 시작된 반면, 개발도상국에서는 최근에 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2050년이 되면 쿠바가 등장하고 핀란드와 스웨덴은 빠지는 양상으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노화된 국가이다. 2015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33%를 차지한다. 그 뒤를 독일(60세 이상 인구 28%), 이탈리아(28%), 핀란드(27%)가 잇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유엔의 전망에 따르면 2050년에는 60세 이상 인구 비율이 지금의 일본보다 높은 국가가 42개국이나 된다는 것이다(표 1 참조).

표 1 2011년과 2050년 60세 이상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10개국

(단위: %)

2011년		2050년	
일본	31	일본	42
이탈리아	27	포르투갈	40
독일	26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40
핀란드	25	쿠바	39
스웨덴	25	한국	39
불가리아	25	이탈리아	38
그리스	25	스페인	38
포르투갈	24	싱가포르	38
벨기에	24	독일	38
크로아티아	24	스위스	37

출처: 유엔인구국(2011).

오늘날의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이 고령화를 경험하기 시작했을 당시의 소득 수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훨씬 빠른 고령화 속도에 적응해야 한다.

많은 개발도상국에서의 고령화 속도는 과거 선진국에서의 고령화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 결과적으로 오늘날의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이 고령화를 경험하기 시작했을 당시의 소득 수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훨씬 빠른 고령화 속도에 적응해야 한다(표 2 참조).

표 2 2011~2050년 60세 이상 인구 비율의 변화가 가장 큰 10개국
(단 2011년 인구가 1백만 명 이상인 국가 대상)

	2011~2050년, 비율의 변화 (% 포인트)	2050년 60세 이상 인구의 비율 (%)
아랍에미리트	35	36
바레인	29	32
이란	26	33
오만	25	29
싱가포르	23	38
한국	23	39
베트남	22	31
쿠바	22	39
중국	21	34
트리니다드 토바고	21	32

출처: 유엔인구국(2011).

또한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60세 이상 인구가 2000년에서 2015년 사이 2.3% 포인트 증가한 반면, 2015년에서 2030년 사이엔 12.3%에서 16.5%로 4% 포인트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2030년이 되면 노년층 인구 비율은 유럽과 북아메리카 25%, 오세아니아 20%, 아시아, 남아메리카, 지중해 17%, 아프리카 6%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50년이 되면 세계 인구의 44%는 적어도 인구의 20%가 60세 이상인 고령 국가에서 살게 될 것이며, 4명 중 1명은 인구의 30% 이상이 60세 이상인 국가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인구 고령화의 주요 원인

인구 고령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다음 세 가지가 꼽힌다.

- 수명 연장: 전 세계 기대수명은 1950년 이후 20년이 늘어났다(1950~55년 48세에서 2005~10년 68세로). 유엔인구국(UN Population Division)은 21세기 전반에 글로벌 기대수명이 76세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 출산율 감소: 세계 합계출산율은 1950년 5명에서 오늘날 2.5명으로 감소했으며, 2050년이 되면 2.2명으로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산된다. 가족당 자녀 수가 줄어들면서 자연히 노년층의 상대적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 “베이비 붐” 세대의 고령화: 세계 2차 대전 직후 태어난 세대의 노년층 진입이 세계 고령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가 반드시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고령화 이슈

| 고령화와 경제

경제성장은 노동인구의 규모와 질에 크게 좌우된다. 50세를 넘어선 인구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저조해지고, 수입원이 없는 노년층이 생활비를 저축에 의존하다 보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국가의 경제성장 속도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 심지어 일부 고령화 국가는 경제 규모가 줄어드는 경험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가 반드시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인구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미국 하버드대학의 한 연구(Bloom, Canning, Fink, 2010)는 고령화가 반드시 노동인구 감소로 이어진다는 주장에 반론을 제기한다. 이 연구는 고령화로

인해 세계 경제활동 참여율이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출산율 감소로 인해 전체 인구 대비 노동인구는 오히려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노년층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증가하지 않으면 노년층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급격히 커질 것이라는 두려움은 세계 전체를 놓고 보면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표 3을 보면 세계 경제활동 참여율은 2005년에서 2050년 사이 4.4% 포인트 감소하지만 같은 기간 전체 인구 대비 노동인구 비율은 오히려 1.9% 포인트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인구 고령화가 반드시 경제위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해 준다.

표 3 세계노동인구: 1960, 2005, 2050년

	1960년	2005년	2050년(추정)
경제활동참여율(15세 이상)	67.4	65.8	61.4
인구 대비 노동인구 비율	42.3	47.1	49.0

출처: Bloom, Canning, and Fink(2010).

또한 '2차 인구배당효과(demographic dividend)'에 대한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생산가능인구가 소비인구보다 큰 국가는 1차 인구배당효과의 혜택을 본다. 그러나 출산율이 낮아도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와 저축이 장려되고 노후 대비를 위한 자산 축적이 고무되는 사회에서는 저축 증가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2차 인구배당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노년층의 복지는 공적 이전이 노년층의 소비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관계가 있다.

| 노년층 복지

일반적으로 노년층의 빈곤율은 전체 인구의 빈곤율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나라와 지역에 따라 분명한 차이는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나 아시아 일부 국가처럼 연금제도가 없거나 연금제도의 소득보장성이 낮은 국가에서는 노년층의 빈곤율이 다른 인구층의 빈곤율보다 높다. 반대로 남아메리카 일부 국가와 유럽처럼 보장성이 높은 연금제도가 정착된 국가들의 노년층 빈곤율은 일반 인구의 빈곤율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낮다.

소비행동의 연령별 유형을 살펴보면 노년층의 복지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저·중소득 국가에서는 노년층의 소비 수준이 다른 인구층에 비해 낮아 노년층의 복지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고소득 국가 노년층의 평균 소비 수준은 다른 인구층에 비해 높다. 많은 고소득 국가에서 공적 이전이 노년층의 소비를 진작해 중요한 재분배 기제의 역할을 한다. 반대로 저·중소득 국가에서 노년층은 대부분의 의료비를 사비로 지불한다. 이렇듯 노년층의 복지는 공적 이전이 노년층의 소비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관계가 있다. 노년층의 복지 수준이 다른 인구층보다 낮은 저소득 국가에서 공적 이전은 노년층 소비 재원의 15%를 차지하는 데 반해 고소득 국가에서는 30% 이상을 차지한다.

| 만성질환 증가

인구 고령화가 불러오는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만성질환의 증가이다. 만성질환은 현재 사망 원인의 60%를 차지하며, 장애와 사망으로 인한 손실 수명의 절반이 만성질환에 기인한다. 부국, 빈국, 노년층, 생산가능인구 가릴 것 없이 만성질환은 압도적인 수준의 장애 및 사망 원인이 되고 있다.

| 병약 기간의 단축

노년층의 증가와 함께 두드러진 현상은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의 축소(Compression of morbidity)"이다. 기억력 강화 약제로부터 첨단 인공관절에 이르는 항노화(anti-aging)기술과 건강한 생활습관은 수명만 연장한 것이 아니라 노년을 더 건강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신체 일부의 기능이 손상되고 몸과 마음이 허약해지는 병약한 시기가 인생 주기에서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로 더 짧아져 잠재적 근로 수명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지식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점점 더 많은 근로자들이 지금의 정년을 넘은 노년에도 생산적인 근로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식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점점 더 많은 근로자들이 지금의 정년을 넘은 노년에도 생산적인 근로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독일에서는 급여성식에 인구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연금 수급액이 줄어드는 “지속 가능성 지수”가 포함되어 있다.

노년층에 특화된 의료 정책이 절실하다.

정책 대응

| 노년층의 사회보장과 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

인구 고령화에 대응해 많은 저·중소득 국가가 사회보험식 연금제도의 보장성(coverage)을 확대하고, 기초연금제도(non-contributory social pensions)를 도입하는 변화를 추진했다.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많은 고소득 국가들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높이며, 수급액은 낮추고 기여율은 높이는 연금제도 개혁에 착수했다. 독일과 스웨덴 같은 나라들은 실제 연금 지급액이 근로자 대비 은퇴자 비율에 따라 정해지도록 제도를 개혁했다. 또한 독일에서는 급여성식에 인구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연금 수급액이 줄어드는 “지속 가능성 지수”가 포함되어 있다. 스위스는 아이의 출생 시점부터 연금 기금을 적립하는 특이한 경로를 취했다.

| 노년층의 건강 보장

모든 사람의 복지와 건강을 최대한으로 증진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제도를 인구 고령화에 맞춰 개혁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러한 개혁을 위해 각국이 보건 예산을 터무니없이 높일 필요는 없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인구 고령화보다 의료 분야의 기술 변화, 개인 소득의 증가, 연명의료(end-of-life care)를 둘러싼 문화적 규범과 태도가 의료비 상승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년층은 구성원 간의 보건·복지 욕구가 매우 다른 집단이다. 따라서 장애의 발생 분포와 심각성을 이해하는 것은 고령화가 보건의료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열쇠이다. 2013년을 기준으로 세계인들은 장애로 인해 평균적으로 9년이라는 건강 수명을 잃었다. 늘어난 수명만큼 장애를 갖고 살아간다면 그만큼 의료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질병 발생을 최대한 늦추어 병약한 기간을 최소화한다면 증가한 기대수명이 국가의 보건의료시스템에 미치는 부담은 그만큼 감소한다. 노년층이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도록 하는 것이 정책 개발에서 핵심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60세 이상 여성에게 나타나는 주된 장애는 단극성 우울증(unipolar depressive disorders)이며 청력 손실, 척추·목 통증, 알츠하이머, 치매, 골관절염이 그 뒤를 잇는다. 남성은 청력 손실이 주된 장애이며 척추·목 통증, 낙상 골절, 만성폐질환, 당뇨병 등이 그 뒤를 따른다. 노년층에 특화된 의료 정책이 절실하다.

| 노년층의 경제활동 참여 권장

인구 고령화 대응책으로 정년 연장 옵션이 있다. 오래 일해야 혜택이 돌아가도록 조세·복지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 일본의 60~64세 경제활동 참여율은 호주, 캐나다, 미국보다 높다. 그러나 일본의 공적연금제도에서는 여전히 소득조사(earnings test)를 하고 있어 일할 의사와 역량이 있는 나이 든 근로자를 노동시장에서 몰아내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도 일본 기업의 관행인 60세 정년 제도는 문제를 가중시킨다. 공적연금제도의 소득조사와 강제 은퇴의 부정적 효과를 막기 위해 일본 정부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올렸으며 기업의 정년을 65세까지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그 결과 60~64세 경제활동 참여율이 2006년 71%에서 2009년 77%로 늘어났다.

한편 2015년 기준으로 세계 65세 이상 인구 중 남성 30%와 여성 15%는 경제활동에 참여했다. 개발도상국의 노년층이 선진국의 노년층보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일부 지역별 연금제도의 유무와 구조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럽,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에서의 노년층 경제활동 참여율은 1990년 이래 계속 증가해 왔으며 미래에도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반해 아시아, 남아메리카, 지중해, 아프리카에서의 노년층 경제활동 참여율은 조금 줄어들었다. 그러나 1990년 이래 여성 노년층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모든 지역에서 증가했다.

| 이민

이민은 근로자를 보내는 나라나 받는 고령 국가 모두에 이익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민 유입이 인구 고령화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데다 최근 유럽의 이민 위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대량 이민 유입은 정치적·사회적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기업은 노령 근로자의 처우와 역량 개발에 좀 더 주목해 이를 기업의 경쟁적 우위로 만들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기업의 관행

21세기 기업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근로자의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기업은 직무 및 업무시간 제도를 유연하게 만들어 경험·지식·충성도·신뢰도 등이 높은 노령 근로자를 최대한 활용하고, 사내 건강 증진 프로그램으로 의료비용을 줄여 노령 근로자를 활용함으로써 최대의 생산성을 얻을 수 있다. 많은 나라가 노령 근로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급여 지불 방식을 연공서열(seniority-based system) 방식에서 성과방식(performance-based system)으로 바꾸고 있다. 기업은 노령 근로자의 처우와 역량 개발에 좀 더 주목해 이를 기업의 경쟁적 우위로 만들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출처

-
- David E. Bloom, et al(2011), Population Aging: Facts, Challenges, and Responses.
 -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2015). *World Population Ageing 2015* (ST/ESA/SER.A/390).